

제429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21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1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1

(09시35분 개의)

○소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외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계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외교부1차관 박윤주입니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2차관 김진아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세요. 앉으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소위 자료 11권입니다.

3페이지 외교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증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1번, 면허료 및 수수료(여권세입)입니다.

이 세입과목은 수입대체경비이므로 지출사업인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과 예산액을 일치시키기 위해 153억 8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저희는 증액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3건, 감·증액사업 9건이 있습니다.

1번 사업부터 15번 사업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페루(ODA)부터 19페이지 15번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까지 총 15개 세부사업은 모두 특정 국가 및 국가그룹에 대한 ODA 예산사업입니다. 이들 사업의 경우 지적사항이 모두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국제기구 약정 체결 지연, 수원국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감액 의견으로 지적 내용이 유사합니다.

○송기현 위원 수석님 잠깐만, 13번까지는 지연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고 14번·15번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13번까지는 먼저 해 주시고 14·15번은 별도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알겠습니다.

13번 가나(ODA)까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에 대한 외교부의 전체적인 입장을 들어 보시고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2026년도 정부 ODA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조 원, 외교부는 ODA는 6241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에도 불구하고 무상원조 분절화 해소 첫걸음으로 일부 사업별로는 증액이 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신 수행 기관이 다수의 소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서 해외에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줄이면서 국내에서 장학·연수사업을 확대함으로써 ODA 중장기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통합적인 무상원조 수행 체계의 구축을 위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감안해서 예산을 심사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떻게 하죠?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저희 부에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송기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기현 위원** 근데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집행이 부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다만 그게 세부사업명으로 보면 금액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13번까지 제기된 사항 있잖아요. 그 사업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셔 가지고 실제 감액이 가능한 부분,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들 골라내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렇게 하면 감액된 내용을 간사님들께서 보시고, 외교부에서 하겠다는 부분까지는 충분히 감액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1번 페루(ODA)부터 16페이지 가나(ODA)까지 보류하고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일부 감액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류해 주시고.

○**소위원장 한병도** 예,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감액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까지는 마치고, 17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7페이지 14번 아시아태평양 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개발패키지 형성 컨설팅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구체성이 불명확하고 기존 KOICA 역할과 중복되며 성과가 불확실하므로 26년도 증액분 12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10억 원 증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태국 삼각협력 아세안 전기전자산업 탄소중립 역량강화사업에 대해 사업총괄관리사 선정 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11억 9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내역사업인 동티모르 영유아 교육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9억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개발패키지 형성 컨설팅은 지역별로 원조 내 세부사업인 국가그룹 내역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데요. ODA 통합……

○**이소영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증액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정부안 원안 유지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차관님, 개발패키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어제저녁에도 쭉 훑어봤는데 KOICA 조사하고 계속 기능이 중복돼요. 그리고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불투명한데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산 금액만 제시돼 있고. 학교, 병원, 인프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이 전체를 봐도 뭐 별로 없어.

그래서 증액분 192억 7000만 원 본 위원은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한 게 틀렸는지.

이게 어떤 게 있습니까? 조사 기능이 어떤 게 있습니까? KOICA하고 굉장히 중복돼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2026년에는 ODA 효율화를 위해서 사업 구조조정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행기관으로부터 공고를 통해서 K-ODA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추진하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증액을 편성하였고요.

시행기관 공고를 통해서 공공 분야 전문성 그리고 KOICA의 개발 전문성을 결합해서 시행기관 숫자를 축소하고 대신에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 형태를 좀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잠재력을 확인해 주셔서 예산을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이 어느 정도 설명했는데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게 보고서나 컨설팅 산출물 생산에만 치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시라고 했더니 좀 늘어놓으니까 안 돼, 어떤 상황에서…… 이게 ODA 본연의 취지와 굉장히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업체만 배부르게 하는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92억 7000만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우선 실제로 지금 120억 제기된 사업 있잖아요. 개발패키지 형성 컨설팅 사업. 이게 지금 야당 위원님께서 KOICA 역할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해외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계신단 말이지요.

그런데 KOICA 같은 경우 KOICA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ODA 사업하고 좀 다르게 있잖아요. 그 설명을 차관님이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이 사업.

○**소위원장 한병도** 옆에 실무 배석하신 분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송기현 위원** 잠깐만, 누가 대답하시나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박종한입니다.

제가 사업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목은 개발……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 사업 설명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송기현 위원** 아니, 사업 설명을 하지 말고……

어떻게 보냐면, 이게 지금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KOICA에서 하면 안 되냐, KOICA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느냐,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지금 KOICA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업들은 컨설팅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이 나중에 실제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파일럿 사업까지 KOICA

예산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지금 이것은 증액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러 기관이 하던 것들을 앞으로는 KOICA한테 좀 더 몰아서 해 주겠다는, 통합성을 위한 증액입니다.

○송기현 위원 KOICA의 역할을 많이 시킨다는 얘가지요. 그렇지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맞습니다. 작은 기관들이 너무 난립해 있기 때문에 KOICA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개발 전문성이 있는 KOICA를 통해서 사업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송기현 위원 다른 데는 이런 새로운 사업을 좀 많이 안 한 거예요, 올해?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예전에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송기현 위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건 이제 다 빼고?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예, 다른 데서는 줄이고 KOICA에서 늘리는 사업입니다.

○송기현 위원 그렇지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다른 데 줄었으면 전체적으로는 불필요하게 늘어난 건 아니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예, 맞습니다. 다른 데서는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KOICA 예산 증액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서 좋은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송기현 위원 그렇지요. 기존 KOICA가 했던 역할을 좀 강화해서 한다는 얘기니까.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게 설명이 좀 잘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예산 낭비는 좀 덜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지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예, 오히려 예산은 낭비를 덜 시키는 그런 유형의 증액입니다.

○송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관님, 제가 또 추가로 제기한 게 있거든요. 태국 삼각협력 아세안 전기전자 산업 탄소중립 역량강화사업 이것하고…… 이것은 지금 사업이 지연돼 있어요, 지연 자체가, 25년 사업비가.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25년 신규 사업이고요. 11월 중에 사업수행자와 계약 체결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인 사업입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25년 이제 겨우 사업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25년 예산 자체도 사업 집행이 지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 가지고 26년에 다시 늘리면 분명히 집행이 안 될 건 뻔한 거잖아요? 이걸 좀 줄일 필요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13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같이 포함해 가지고 그 범위를 정해서 가지고 외교부에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알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다음에 동티모르 사업도 마찬가지로요. 이것 사업 집행이 지연됐는데 오히려 증액이 돼 버렸어요, 올해 예산이.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는……

○송기현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유니세프랑 문안 합의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순연이 됐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계약 때문에 집행이 지연됐는데 그 상태로 내년
에 더 증액해서 하게 되면 그만큼 안 늘 것은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알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차관님, 이것도 지난번 13번까지 한 것 중에 같이해 가지고 소위 간사
위원님들한테 정리해서 의견을 좀 주세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감액을 검토해서 산정을 제출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걸 감액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잠깐만, 자료제출 요구니까요.

조정훈 위원님 하고……

○조정훈 위원 간단하게……

아까 국장께서 잠깐만 일어나 보시지요.

이 사업의 취지를 다른 작은, 작다기보다 하여튼 ODA 역량이 아직은 개발이 안 된
부처에 분절돼 있던 걸 다 삭감하고 KOICA 예산에 몰아줌으로써 집중 효율화 뭐 이러
지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삭감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타 부처 무상 사업의 삭감 총액은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전체 ODA 예산이 1.2조이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 증액은 120억인데……

그러면 이것 아마 보류될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저희가 소소위에서 논의할 때 검토할
때 쓰게 이 예산을 증액하는 매칭으로 삭감한 예산이 각 부처별로 기관별로 얼마인지 제
출해 주십시오.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예, 기재부와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간사님, 똑같으면 정리하겠습니다.

개발패키지 형성 컨설팅, 그다음에 태국 삼각협력 아세안 전기전자산업 역량강화사업,
다음에 동티모르 관련 이 내용도 전체 보류를 하고 16페이지 ODA 관련 보고를 할 때
함께 포함해서 감액 포함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한병도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속기록에 이게 좀 착오가 있어서 속기록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192억 이랬는데 120억으로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착각해서 말을, 120억인데……

○소위원장 한병도 예.

여기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4번 사업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15번 사업도 지금 송기현 위원님께서, 동일한 사항인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동일한 유형이기 때문에 같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도 보류하고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소위에.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글로벌연수(ODA)입니다.

내역사업인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내 청년 고용난 심화 상황에서 수원국 인재 양성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지 않고 연수 후 본국 귀환 원칙으로 국내 노동력 기여 효과가 불확실하므로 42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청년리더 육성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도 앞의 사업과 동일한 이유로 22억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의 예산 310억 원을 투입해서 건립한 KOICA 연수센터의 최근 2년간 가동률이 40%에 그치고 있고 공실이 충분함에도 외부 숙소를 이용함으로써 1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된 바 있으므로 1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저희는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사업이나 KOICA 연수 사업 등은 우리 산업계에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부안 원안 유지를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 최형두입니다.

16번 의견에 대해 저는 감액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대부분 이럴 경우에 연수 후 본국 귀환합니다. 국내 노동력 기여가 불확실하고요, 단기 연수 위주의 프로그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인 계획을 외교부가 수립해 주길 원합니다.

제가 몇 차례 예결위 회의나 전체 대정부 질의에서도 외교부장관, 역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ODA 사업 방식을 대부분 보면 수원국가의 사정으로 지출이 잘 안 돼 가지고 집행이 안 되어서 계속 ODA 감액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는 수원국가 대상의 우수한 인재, 특히 이공계 인재를 국내 우수 대학에 유학생으로 초대를 해서 거기에서 가르쳐서, 이렇게 단기가 아니고요 진짜 엘리트들을 유입을, 초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1950년대에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를 지원할 때 험프리 부통령 당시에 험프리 부통령이 자기 고향이던 미네소타를 중심으로 미네소타 대학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

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가 전부 그 미네소타 대학 프로젝트를 통해서 의사들이며 행정가들이며 많은 과학자들이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특히 아세안 국가들, 우리랑 특별히 관계를 강화해야 되는 아세안 국가들 같은 곳을 상대로 최우수 이공계 졸업생들을 석박사과정으로 유치를 하고 거기에, 국내 우수한 대학 자격을 갖춘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대학에서 공부를 시켜서 단기 연수 마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수한 인재를 부족한 우리 국내 이공계 인재로 양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내추럴라이즈(naturalize)까지 시키는 것까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우리가 정말로 부족한 글로벌 인재도 보완을 하고 또 수원국가들과의 보다 긴밀하고 정말 영원히 깨지지 않을, 골든에 나오는 가사처럼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찢끔찢끔 단기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연구 프로젝트를 제가 증액안을 낸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내경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고 수원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정말 영원히 깨지지 않을 그런 인적 관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R&D 인력을 국내에 유입하게 되면 예전에 미국에 우리 아시아의 우수 인재들, 인도 인재들이 가서 미국 산업을 키웠듯이 이제는 아세안이라든가 또 다른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사우스의 정말 우수한 인재들을 해서……

지금 얼마나 한국의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까? 우리 정부가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유학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짠 학교를 지원한다면……

○소위원장 한병도 좀 요약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굉장히 훌륭한 이것을 발전……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는 소용이 없고 감액 의견을 유지를 하되 보다 적극적인 우수 인재 국내 유입 그리고 국내에서 양성해서 장기적으로 국내 R&D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한병도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차관님, 최형두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취지도 굉장히 좋고. 그렇지요? 당연히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정말 전문적으로 해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지역 경제에 도움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번에 사업이 점점 커져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대략 취지는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야당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이것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실질적으로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것을 원안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당에서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아시나요? 지방대가 학생을 모집을 못 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방대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 많으세요. 지방대에 있다 그래 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안 돼요. 굉장히 우수한 교수님이 많으신데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안 간단 말이에요.

저희 강원도 지역의 일부 대학 보면 동남아 이런 데서 온 학생들 보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 나라에서 진짜 똑똑한 애들이 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대학을 활성화시키면서 지방경제를 또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올해 꼭 유지될 뿐 아니라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사실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석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잔류 기회가 상당히 많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청년리더 육성 프로그램은 단기가 아니라 중기 연수로 이번에 6주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두 단계로 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현지 연수를 통해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현지로 와서 지방대학 그리고 기업·지자체 등 연수 사업에 활용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원안 유지를 하되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최형두 위원 아니, 이것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단기 연수로 와 가지고 불법 이민자들만 남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ODA 사업 구성 방식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찢끔찢끔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이 사업의 핵심이 원래는 현지에서 수행됐던 고비용 사업들 축소하고 우리 국내의 인프라, 즉 지방대학이나 연구기관, 공공기관 연수센터도 활용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도 하고 또 우리에게 우호적인 개도국에서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친한 인사들 양성하는 그런 강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될 것 같고 또 나름대로 KOICA에서 학위 연수나 여러 자격들 이런 것들도 제공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은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나라로 오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비용을 더, 외국에서 쓸 돈을 우리 국내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원안에 동의해 주시고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래서 지금 여당 위원님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질문, 조금 혼란스러워서요.

이게 ODA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ODA 사업의 목적은 결국은 수원국을 도와주는 게 ODA 사업입니다. 기본적인 취지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익도 취하는 게 맞지만 이 사업을 제가 좀 물어볼게요.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전문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 국내에 정주시키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게 목적입니까? 정책의 목표가 뭐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정책 목표는 특히 과학기술 분야, 민간 인재 국외 학위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개도국의 인재 양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으로서는 친한 인사 네트워크를 또

구성한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국 귀환 원칙이 맞는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27년부터는 귀환 지원사업도 하겠다는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맞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한 잔류 기회도 같이 부여하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 대학교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자체는 지역 대학교의 수입으로 잡힐 테니. 하지만 이분들은 와서 연수 또는 학위를 취득하고 본국 귀환 원칙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수혜국에서는 똥똥한 인재 한국에 다 뺏기는 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ODA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 정책의 목표를 혼동하면 안 된다. 과연 그게 맞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돈을 들여서 외국에서 그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인재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본국 귀환을 시킨다 이게 정책의 디자인이지요?

차관님, 맞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맞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개발협력사업의 원칙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강승규 위원 결단해 주시지요.

○조정훈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조금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승규 위원 또 보류야.

○소위원장 한병도 방금 고민해서 원안 유지해 줄 줄 알았더니 갑자기 보류야.

○조정훈 위원 아니, 아까 송기현 위원님 등등이 말씀하신 그 목표, 이 지역 개발에 기여하고……

○조계원 위원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정훈 위원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이 정책 목표가 아니라는 거지요.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현지에서 비용을 낭비하는 것보다, 고비용 낭비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교육을 해 주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육기관도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 나라도 좋고」 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그 나라도 좋고. 그 맥락이잖아요.

김기웅 위원님도 동의하셨는데, 한번 우리도 원안 유지도 좀 만들어 보고 하시지요.

○송기현 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류하시기 전에, 내역사업 중에서 검토하셨나요? 박형수 위원님 제기한 것도 하고 있는 거야?

○조정훈 위원 저는 미래인재 사업은 동의할 수 있는데 청년리더 육성 프로그램 박형수 위원도 감액 의견이 있어요. 이것은 또 박형수 간사님이……

○소위원장 한병도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보류 그다음에 청년육성 프로그램은 원안 유지 이렇게?

○조정훈 위원 예,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한병도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사업은 보류하고요. 다시 소소위에서 논의하고 청년리더 육성 프로그램은 원안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엿것 박형수 위원님이 제기한 것은……

○조정훈 위원 그게 청년리더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송기현 위원 아니요, 12억짜리.

○이소영 위원 KOICA 연수센터……

○조계원 위원 송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송기현 위원 제가 그것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것은 외교부가 아직 답변을 안 했으니까 한번 들어 보시고.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글로벌연수센터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취지가……

○조정훈 위원 박형수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송기현 위원 취지가 거기에 숙박하는 연수원이 있는데 왜 외부에서 숙박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나 이런 취지로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질문 주신 바에 대한 저희 답변은요, 사실 이것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시설이 노후화가 되었다라는 측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연수원을 활용하는 일정을 좀 분산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노후화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숙박을 보다 견인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면 일단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하고 그 전에는 12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감액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기본적으로 고정비용이 듭니다, 연수원 이용하기 위한.

○송기현 위원 그러면 지금으로써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송기현 위원 현재 상태로는 시설 노후화 때문에 숙박을 할 수 없고 또 내년도 연수 일정상 중복이 되는 바람에 연수원에서 다 수용할 수 없다, 차관님 말씀은 그런 취지세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그래서 그 기간을 일단 앞으로는 계속 분리를 해 나갈 겁니다.

○송기현 위원 내년에 기간을 꼭 펼치면 이 돈이 필요 없이 연수원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조계원 위원 감액해도 되냐 이거지요.

○송기현 위원 감액해도 되냐 이거예요.

○소위원장 한병도 실무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아까 말씀드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사실은 증액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수원을 운영하기 위

해서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감액하신다고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어 가지고 실제로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가동률이 더 낮아지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수원 활용률을 높이는 하겠지만 저희 노후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그렇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원에서 숙박을 시킬 수 있도록 일정을 쪼개 펼치면 지금 외부 숙소에서 교육할 때 필요한 숙소 이용료 부분 상당은 깎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지금 숙소 이용료 관련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수가 4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이 돼 가지고 충돌되는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정상 어쩔 수 없이 공실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아니, 지금 차관님은 그걸 펼쳐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일정이 뽁뽁해서?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예, 그래서 지금 1·4월이라든가 11·12월……

○송기현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12억 정도가 나온 게 땀 데, 밖의 호텔 숙박료를 쓰니까 그 돈을 깎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깎을 수 있는 범위가 얼마 정도냐 이런 얘기가, 내역을 펼치면.

○조정훈 위원 이 12억이 다 외부 숙박료 아닙니까?

○김기웅 위원 그 센터, KOICA 센터 유지비가 지금 얼마예요, 12억 중에 반영된 게?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지금 센터 유지비는 육십몇억 정도 돼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예산이……

○김기웅 위원 따로 돼 있고, 그러면 이 12억은 오로지 그 숙박비예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그 12억은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정확히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수와 관련해서는 별도 경상경비는 따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박형수 위원님은 40%밖에 안 되니까 전체 운영비 중에서 12억을 깎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국장님 말씀은 외부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숙박하는 예산은 땀 데 들어가 있든 어디 들어가 있든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 예산이라도 깎을 수 있지 않냐, 내가 이런 얘기에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그 예산이 얼마나 될지는 실제 저희가 좀 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산정해 가지고……

○송기현 위원 산정해서 보고하세요.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내가 시간이 가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공직에도 있어 봤고 대학에도 있어 봤고 국회에도 있어 봤는데 이거는 기재부에서 진짜 아셔야 돼요. 전국에 있는 연수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유지관리보수비가. 지금 여기에도 40%밖에 안 썼잖아요. 왜? 우리가 국회에서 구내식당에서만 밥 먹습니까? 외식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전부 연수원 시설을 풀가동해 갖고 아웃소싱을 주고 그러면 그 지역 상권도 살아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정부에서 다 하려고 하면, 외교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 교육청에도 전부 연수원, 어디도 연수원, 대한민국에 연수원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거 기재부에서 진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잘 들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이것 12억 근거도 좀 파악을 해 보시고요. 산정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 글로벌연수센터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러면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내역사업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보류 그다음 페이지 청년 리더 육성 프로그램은 정부 원안 그리고 마지막 12억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6페이지입니다.

17번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입니다.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국산 차 우선 구입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일부 공관들은 공관장의 차량으로 외국 기업의 차량을 구입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40억 5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필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지금 저희가 이게 굉장히, 공관장뿐만이 아니고 공관 직원들을 위한 행정차량도 있는데요. 두 가지 다 5~6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게 교체가 안 되게 되다 보면 안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외국산 차량을 구입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그쪽에서 정비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부품이 없거나. 그래서 차량 자체를 기본적으로는 국산을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국산 확률이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꼭 필수경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한번 물어볼까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질문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여기 이것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5년 내지 6년이면 교체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자격은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전부 몇 대예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올해 67대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 67대가 지금 사용을 평균 몇 년 정도 했나요? 내구연한이라는 게 교체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에 비추어서 모두 다 교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안에서 또 승인을 하거든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67대의 상태를 봤을 때, 신청 들어온 것 상태를 봤을 때 이 정도, 67대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깎는다는 게 저는 조금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원안 유지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잘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이것 일단은 최대한, 저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 않으니까요. 공관의 기본 업무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잠재적인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자료요청, 일단은 제가 제안드리는 건 보류로 하고 최대한 원안 유지해 드릴 테니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공관에서 해외 차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솔직히 부품 정비가 어렵다 이런 나라 몇 개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래서 굉장히 비율이 낮습니다. 제가 그걸 더 체크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명단 주시고 최대한 국산 차를 쓸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소소위 정리 과정에서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방향으로 정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 사업은 원안 유지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원안 유지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조정훈 위원 아닙니다. 일단은 보류하고 자료를 받아 보고 최대한 반영하겠더라는 뜻이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해외 차 사용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원안 유지하고 보고하는 게 아니고?

○조정훈 위원 예,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합당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동의하겠더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말씀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의 취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심사를 꼼꼼히 해야 되니까 자료 다 요청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예산소위 일정이 잡혀서 지금 법정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이고 어제, 그제도 계속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사

실상 습관적인 보류라는 그런 인식이 제삼자가 보면 들 수밖에 없다. 소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소소위로 다 넘기면 우리 여기 뭐 하러 있습니까? 그냥 정부가 동의하는 것들 기계적으로 다 빼내고 나머지 다 모아서 소소위 기간을 지금보다 한 2배 늘리세요. 여기 지금 다들 바쁘신 국회의원들, 여야 위원들 모여 가지고 심의하는데 웬만하면 합의를 봐야 그게 원칙인 거지요. 웬만하면 보류한다, 이게 회의 무용론이 안 나오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이런 정도까지도 보류를 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

○소위원장 한병도 예,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1차관님이 담당하시나요?

1차관님, 차관!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송기현 위원 회의에 집중하셔야지 뭐 하는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죄송합니다. 다른 자료……

○송기현 위원 차량구입을 1차관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차를 몇 대 사겠다고 정해 놓고 예산을 산정하셨네.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차가 좋은지 아니면 그대로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몇 대 사야 되겠다 수요를 잡은 다음에 내년에 이것 이것 사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을 작성해야지 무조건 차를 몇 대 사겠다고 정해 놓고 예산 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러니까 예년 수준으로 보통 늘 오류 년이 경과한 이상 그걸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제도개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예산편성 기간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연초에 그것을 승인이 떨어질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방향을.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면…… 67대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송기현 위원 67대 부분을 살 것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보면 차관님……

○조계원 위원 67대 중 55대입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다 그렇게 승인이 되지는 않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지금 필수적으로 바뀌야 될 만한 차가 몇 대 정도 돼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저희가 보통 예년 오류 년 주기로 상정해서 한 건데 실제로는 한 55대 정도……

○송기현 위원 55대 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올해 예산 하는 게?

○조계원 위원 그 예산이 지금 이거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거기 반영해 놓은 게 지금 저희가……

○송기현 위원 이거는 67대 기준으로 한 거라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왜 그러냐면 환율이 지금……

○송기현 위원 외교부는 항상 환율만 얘기해, 뭐 얘기하면 환율 얘기한다고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래서 실제로……

○송기현 위원 그러면 환율 떨어지면 더 사고 그러는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 재정 당국과 다 상의……

○송기현 위원 요새 차량 5년까지만 타고 그렇게 차를 바꾸는 사람들이, 물론 규정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 10년 타도 돼요, 요새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마일리지 기준이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마일리지도 있는데 무조건 차량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두 가지 기준을 함께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감액을 좀 하시지요. 감액을 좀 하셔서 다 사지 말고 일부만 사세요, 내년엔. 한번 사 보고 하세요. 55대 같으면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30대 정도 사서 한번은 반 정도 사서 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 맞춰서 해 보세요.

○조계원 위원 요청은 67대가 요청이 왔는데 지금 그중에서 55대를 교체하겠다는……

○송기현 위원 30대 정도 교체하시라고요.

○조정훈 위원 송기현 위원님 의견 수용하시면 저희 합의할게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님,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는 공관 차량은 한 700대가량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골라서……

○소위원장 한병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55대면 매년 통상적 교체 수준의 평균 정도 낸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올해뿐만이 아니고 전에도 그랬고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위원님들, 제가 한번 가운데 제안을 하면 이게 67대 중에 55대니까, 더 해야 된다 뭐 보류해야 된다 하는데 특별한 쟁점이 없고 차량 구매 이런 거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서 이거는 위원장이 원안 유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40억이 몇 대예요? 67대예요, 55대예요?

○송기현 위원 55대.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55대입니다. 환율로 하면 55대입니다.

○조계원 위원 67대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55대 정도 교체한다는 거예요.

○조정훈 위원 55대만 교체하실 거예요, 확실하게?

○소위원장 한병도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제가 웬만하면 외통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송기현 위원 편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김기웅 위원 아닙니다. 공관에 나가 보면 실제 현실은 10년이 됐는데 교체 안 해 주는 것도 있어요, 좀 별 볼 일 없는 공관들 가 보면. 반영이 안 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 주지를 않아. 또 잘나가는 공관은 5년만 되면 딱딱 바꿔 줘서 제네시스 죽가 있는 데가 있고 벤츠를 왜 굴리나 했더니 교체가 안 되니까…… 이게 사정이 다 각양각색이에

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늘 예산 받아 가지고 그냥 인심 쓰듯이 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좋은 공관 대상 10년 넘은 차들, 5년이지만 10년 넘은 차도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10년 넘어서 정말 급한 것들하고 마일리지하고 연수로 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160개 공관인데 공관장 차 있고 의전 차량이 죽 있으면 이 차량들이 언제 구입해서 몇 년 됐고 마일리지 얼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아예 자료를 주면 저희가 앞으로 내년에 얼마가 필요할지 이게 다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 오늘 이거는 하여간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외교부에서 그냥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자료 하나만 있으면 내년에 얼마가 필요할지 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하나를 만드시라 이거지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예산은 원안 통과시켜 주시고요. 자료 제출해서 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집행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지요, 그러면.

○조정훈 위원 저는 송기현 위원님에 동의하는 게 그냥 1년 더 쓰면 되는 그런 차들……

○송기현 위원 1년 더 쓰면 되지 그거를 꼭……

○조정훈 위원 이렇게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7페이지 18번 공공외교 역량강화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하여 수도권 청년에게 역차별을 가하는 사업 방식이므로 9억 1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필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지자체 국제교류 활동 및 지방경제 활성화 분야 일경험을 제공해서 지역인재로서 성장을 도모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간 인재 격차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감안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재외공관 파견 대상 지역인재 선발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임위 결정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수도권이 아니라 17개, 서울 포함 다 된다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걸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걸 수용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래요? 그러면 상임위안으로……

상임위원이 뭐예요? 정부 원안 유지?

(「원안 유지」 하는 위원 있음)

이건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9페이지의 19번 중동 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ODA도 앞서 보류한 사업들과 같은 유형의 ODA 사업이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지방민생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해 6개 신규 내내역사업은 수도권과 지방을 편 가르기 하는 사업이며 불요불급한 행사성 사업이므로 4억 1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저희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방소멸위기 상태에서 지방소멸 대응은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국가적인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방 청년과 지방 민생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제기해 주신 위원님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상임위에서 재외공관 파견 대상 지역인재 선발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추진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동일한 취지에서 신규 6개 사업을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동 사업들의 예산을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저는 이걸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지자체 글로벌 네트워킹 사업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자료 쪽 훑어보니까 전 시성 행사에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행사장 임차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나중에 이게 안 되면, 홍보가 부족하면 억지로 사람들 모아 가지고 동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날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청년·지방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킹 이것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취지가 좋아요. 좋은데, 이런 구체적인 행사장 임차하고 기획하고 여기에 돈이 다 들어가 버리고 없어. 이래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지방민생외교라고 이름은 아주 그럴싸하게 해 뒀는데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 원안 유지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그 말씀이신가요?

○김대식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정도 원안 유지를 해 줘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기현 위원 제가 30초만 말씀드리면, 제가 우선 상임위에서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니까 그건 수용하는데 우리가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어요. 국회도 그렇고 그리고 외교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수도권 사시고. 그러니까 지방에 있

는 청년들이 어떤 상태인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17개 시도 하겠다 그러면 역시 17개 시도 평균해서 할 건지 인구비로 할 건지 모르겠는데 역시 지방 사람들은 또 소외되는 것 아니에요, 지방 청년들은? 지방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 청년들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서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원안 유지하고 외교부에서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들은 김대식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34페이지입니다.

21번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내역사업인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을 위해 일반용역비로 증액 편성했는데 행사 규모 및 전문성이 외부 전문업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고……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또한 동 행사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비목으로 재편성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비목 변경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외교부 의견 들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저희는 상임위 감액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비목 변경이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상임위 의결을 수용해서 비목을 재구성하여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내년도 심포지엄에는 행사 주요 참석자인 우리 기업인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중남미 지역 인사를 초청하기 위해 일반용역비 1억 원으로 최초 정부안을 제출했습니다. 상임위 의결에 따라……

○소위원장 한병도 알겠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다음 기재부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출 효율화 차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데 동의하고요. 원래는 일반용역비로 돼 있는 걸 일반수용비로 비목 전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35페이지 22번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입니다.

외교부 마지막 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남동유럽·흑해연안국 인사교류 사업에 대해 최근 5년간 집행 실적이 전무하여 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저희는 상임위 감액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소관 감액심사 마치겠습니다.

외교부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재외동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김경협입니다.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기획조정관 오진희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66페이지 재외동포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재외동포청은 관사를 운영·관리하면서 근거 규정 없이 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현재 관사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 중에 있고요.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원안 유지?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예, 원안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감액을 철회하고요. 다음에 잘 기준 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감액 철회하고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67페이지 재외동포청 마지막 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입니다.

내내역사업인 학업지원(국내정착) 사업과 내역사업인 해외 동포청년 취업지원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두 사업은 재외동포 교육사업의 본래 취지인 우수인재 발굴·육성과는 거리가 있고 사업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총 4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업을 한 번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범사업 형태로 축소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예산의 절반 수준인 15억 4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29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재외동포 인재유치 정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모가 현재 정책 대상이 약 한 200만 명 정도인데요. 여기에 이번에 지금 예산으로 책정된 대상은 400명, 약 0.0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것 자체가 시범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거의 현금성 지원과는 상관없이 교육훈련기관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청장님, 제가 누구보다도 재외동포청에 관심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예.

○김대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750만 해외동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럽 한 나라가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181개국에 1명 이상 우리 동포가 있더라고요.

나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하는 데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올해 한 반 정도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여기서 굉장히 장단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나오면, 좋은 점이 있으면 내년에 대폭 증액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 정도만 줄여 가지고.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지금 인원수가 사실은 대상에 비해서 너무 적은 인원수입니다. 그래서 한번……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 보자, 처음 사업이니까.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테스트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를 해야 그래도 성과가 검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종면 위원 1000명을 해 갖고 오셨어야지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겨우 0.02%, 400명 정도인데요.

○김대식 위원 한 200명 정도 해 보고 하면 안 될까?

○송기현 위원 원안 유지……

청장님이 과감하게 증액해 달라 그러시지 그것을 원안 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더 하셔야지.

하나만 여쭙볼게요.

혹시 외국인 학생을 들여와서 하는 예산들 있잖아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예.

○송기현 위원 거기에 대비하면 어때요? 이 규모가 굉장히 작은 것 아니에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지금 일반 외국인에 비해서 거의 한 삼사십 %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 외국인 유학생들의 장학사업 지원 수준과 비교하면 동포가……

○송기현 위원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그렇지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비슷한 사업인데 동포에 대한 지원액은 너무 적습니다.

○송기현 위원 확대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 게, 재외동포청의 동포라는 분들은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들입니까?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자도 있고요, 외국 국적이나 무국적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위의 부모나 조부모가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거나 그 후손들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 그룹, 그러니까 재외동포라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룹에서 국적자를 우선할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적은 없지만 다른 국적자들 간의 우선관계는 없습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1%도 안 되는 분이니까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서 국적 기준이라는 것을 둥니까, 아니면 이것 어떻게 뽑으실 겁니까?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지금 국내에 있는 동포라 함은……

○조정훈 위원 그건 알아요, 제가.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국내에 있는 동포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국적자를 가진 분들이 국내에 오면 내국민이 되기 때문에 외국 국적 동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재외동포 교육사업은 100% 외국 국적자를, 동포이지만 외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건 맞습니까?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학업 지원을 해서 천몇백만 원 주는 이것은 학교 다니는 등록금 주는 거라고 치고 또 국내정착비 천몇백만 원을 준다는데 이것은 왜 주는 겁니까?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이 사업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학비를 지원해 장학금을 주는 것과……

○조정훈 위원 그건 알겠고.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장학금은 150명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250명은 취업 지원을 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게 뭘 소리입니까, 취업 지원을 한다는 게?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취업 지원이라 하면 그것은 고등학교 졸업자든 대학교 졸업자든 대학원 졸업자든 국내에 와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같이 국내 중요

한 산업이지만 그 인력을 내국인으로 채울 수가 없어서 외국인이 와서 대신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직장을 가지면 임금 보조해 준다는 겁니까?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아닙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정훈 위원 취업 교육을 시켜 준다?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예.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아닙니다.

○조정훈 위원 교육기관에게 이렇게 모집하면서 해 준다?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모자라면 한국어교육을 시켜 주고 그 분야의 취업교육이 필요하면 취업교육을 시켜 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 거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걸 원안 유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둘 다 원안 유지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끝났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재외동포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훈 위원 청장님, 저희 소위가 원안 유지를 아마 처음 한 걸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통일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통일부차관 김남중입니다.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구병삼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구병삼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80페이지 통일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9건, 감·증액사업 5건 있습니다.

먼저 1번 통일교육 자료개발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의 셋째 줄입니다. 메타버스 콘텐츠 홍보 비용인 1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상임위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번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입니다.

내역사업인 조사결과 활용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입니다.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으나 공개 발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공개보고서 발간 비용 등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는 1억 7000만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2억 1400만 원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상임위 감액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없고요.

그다음에 내부자료 생산·관리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다음 것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다음 거라니요?

○**조정훈 위원** 일단 하나씩 하십시오.

○**통일부차관 김남중** 윤후덕 위원 감액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한병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관련된…… 왜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기웅 위원** 밑의 건 못 받는다 이 얘기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것 2개가 있습니다. 밑의 것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한병도** 밑의 것, 그러니까 1억 7000만 원 상임위 의견 수용하겠다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의 감액에 왜 동의하지요? 그러면 앞으로 북한인권 에 대해서 통일부는 전혀, 오프라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발간 계획이 없어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북한인권기록 관련된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발간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승규 위원** 왜요? 왜 바람직하지 않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접근 방법 중의 하나는 정부, 민간, 국제사회가 각각 다른 역할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북한인권에 대한 공개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대로 민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료 축적 정도를 하는 게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강승규 위원** 아니, 인권보고서가 지금 세계인권보고서든 우리 각 나라에서, 유엔에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하고 우리도 지금 우리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다 보고서 가고 유엔에서도 보고 다 해 가잖아요.

인권 상황 조사를 했으면 발간을 해야지 국가가 그것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겁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북한인권에 대한 공개 부분은……

○**소위원장 한병도** 차관님, 죄송한데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승규 위원님 주장은?

○**강승규 위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원안 유지?

○**강승규 위원** 예.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는 1억 7000억 감액.

이것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은 82페이지, 3번 남북회담 추진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분야별 회담 추진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현 정부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북한 정권의 의지를 감안할 때 예산 증액분 4억 1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입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회담 운영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예산 증액분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여기에 제가 이유를 냈던 것처럼 현 정부를…… 우리 짝사랑만 있었습니다. 회담이라는 것은 서로가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시그널을 보내도 북한에서 전혀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는데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액을 요구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차관님, 회담을 대한민국이 분단 이후로 계속해서 쪽 추진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추진 안 해 온 정부가 없지요. 지난 정부에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었지요. 추진 자체가 좀 적었어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송기현 위원** 그런데 그 이전만 빼면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간에 계속 추진해 왔고 실제 추진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걸 떠나서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걸 대비를 계속해 왔다는 말이지요.

실례로 전에 우리 동계올림픽 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회담을 하고 막 할 때 그때 그

전에 그걸 예상이나 했습니까? 마사일 날리고 막 그러는데, 북한에서. 그렇지요? 그래도 그때도 남북회담에 관련된 비용을 항상 준비를 해 놓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차관님?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저는 이게 그렇게 그런 문제로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차관님, 여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저쪽에서 양국으로 인정하든, 양국 주장하든 한 나라로 인정하든 어쨌든 회담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회담할 수 있게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건 늘 준비하셔야지.

○**통일부차관 김남중** 2017년도에도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18년도에 갑자기 회담이 된 사례도 있고요.

○**송기현 위원** 그때도 예산 되어 있었고, 미리. 그렇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이 사업에 대해서도 내용이 참예하게 깔려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83페이지 4번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칭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사업과 모순되므로 81억 76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상임위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이거 감액인데?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북한인권센터 문제도 똑같은데 인권재단도 인권보고서도 저기 안 하고 국가인권센터도 이걸 특별법에 의해서 오랫동안 추진돼 왔던 건데 이것의 예산 자체를 또 감액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조정훈 위원** 보류하시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시공사의 입찰도 중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송기현 위원**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송기현 위원** 내년도에 추진될 가능성이 없는 건데 거기에다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게 좀…… 아까 그거와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이걸 뭐 안 되는 걸 왜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는데 그것에 대한……

○**송기현 위원** 아니, 이게 사업이 타당하고 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걸 떠나서 내년에 안 되는 거잖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시공사 입찰하는 걸 중단을 시켰습니다.

○송기현 위원 시공사 입찰이 안 돼 가지고, 사실상 안 되는 거예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사실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저는 이거는 매우 아쉽다라는 말을 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는 보편적 가치 아닙니까? 여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서 인권, 자유 이런 걸 그렇게 강조하는데 왜 인권에 대해서는 국경만 넘어가면 멈추니까? 이거는 북한인권센터의 내용을 보시면 북한 주민들이, 뭐 북한 정권 도와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받고 있는 인권적 탄압, 이거 동의하시지 않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센터를 건립하자는 건데……

그리고 아까도 남북회담 추진 가능성 퍼센티지로 숫자로 매길 수는 없습니다만 확정적이지도 않은 예산도 넣자고 지금 주장하시는 상황에서 저는 이걸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정리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이걸 보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문이, 여기 보니까 가칭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은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금 여기 증액……

○조정훈 위원 상임위에서 됐나요 아니면……

○통일부차관 김남중 상임위 쪽에서 됐습니다.

○조정훈 위원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했나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증액 의결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 금액은 얼마인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32억입니다.

○조정훈 위원 예?

○통일부차관 김남중 32억…… 아, 상임위 쪽에서는 32억을 했고요. 원래 예결위 쪽에서는 132억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지금부터는, 한 분만 하고요. 앞으로 여야 말씀하실 때 한 1분 정도로 제가 제한을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대북정책이라는 게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 사업비 감액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새 정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거기 써 있듯이 한반도평화공존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맞습니다. 한반도평화공존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있는 상황

에서 그것에 맞게 예산을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편성할 것은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그러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면 이 사업비는 전액 감액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계원 위원 기록을 위해서 잠깐……

○소위원장 한병도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조계원 위원 계속해서 두 국가론,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계시고 남북 인권이 보편적 가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더 보편적 가치는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 그 속에서 지금 한반도평화공존정책이 오히려 보편적 가치에 맞다,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은 좀 속기록에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알겠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속기록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존경하는 조 위원님에게 크게, 자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보다 더 높은 보편적 가치가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니지요. 저희도 통일을 지향하지만 인간으로서 가장 최소한의, 가장 인류보편적 가치가 인권이지 그것보다 상위 개념이 통일이라고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 토론은 정리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논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이런 논쟁은 중지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기록에 남는 거니까, 이것은 어떤 정의에 관한 것이어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30초만 주십시오.

○소위원장 한병도 예,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고 조계원 위원님 말씀하고 저는 충돌되는 게 없다고 봐요. 다 중요한 가치들이고, 한반도 공존하자는 사람들이 인권을 무시하겠습니까? 인권에 기반해서 공존하겠지요.

저는 예산에 집중해서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감사합니다.

보류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84페이지입니다.

5번 학교 통일교육 강화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의 둘째 줄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중복성이 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미흡하여 예산 운용의 타당성이 낮으므로 49억 13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미래세대 평화·통일·민주시민 인식 확산 사업에 대해 9억 54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이 부분에 미래세대 평화·통일·민주시민 인식 확산 이런 명목의 예산 신규 편성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두 국가론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통일부가 왜곡된 남북통일관을 교육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두 국가론을 지향합니까, 통일부가?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렇지 않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

올해는 왜 감액이 됐어요, 예전에 51억이었는데 49억으로?

○통일부차관 김남중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게 작년과 동일하고요. 그중에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을 형태를 바꿔서 미래세대 평화·통일·민주시민 확산 교육으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기현 위원 당연하지요. 그리고 통일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학자든, 진보든 보수든 통일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사이에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래서 통일정책만큼은 여야 구분 없이, 진보·보수 구분 없이 일정하게 축 유지되어야 된다고, 그 전제가 국민의 공감대다, 그것에 필요한 것은 미래세대가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미래세대가 통일 인식을 좀, 지금 현재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을 확산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현 위원 특히 미래세대가 통일 의식이 낮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중요한 거잖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꼭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도 지금 원안 유지와 감액 의견이 하는데 강승규 위원님, 그렇게……

○강승규 위원 보류.

○소위원장 한병도 예, 이 사업도 보류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속해 왔던 사업인데 이것을……

○강승규 위원 아닙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난 정부 때부터 지속됐던 사업입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게.

○임미애 위원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86페이지 6번 국내통일기반 조성입니다.

내역사업인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통일국민협약을 확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는 5억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25억 원 전액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민 평화통일문화 체험 사업에 대해 상임위는 4억 300만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14억 3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내역사업인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같은 이유로 10억 1000만 원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10억 원, 15억 원,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내역사업인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사업에 대해 같은 이유로 30억 8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 칸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대해 같은 이유로 30억 8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86페이지, 첫 번째 칸의 상임위 감액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밑에 있는 감액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지금 감액 이유로 저희가 제시한 대로 현 정부의 여러 가지 통일정책이나 이런 부분 등이 국민들에게 오히려 체험,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서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감액을 요구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전체 다 감액하시자는 거지요?

○강승규 위원 예.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도 25억 감액을……

○강승규 위원 예.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송기현 위원 참 답답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통일부가 기본적인 이런 것은 전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두 국가론이 아닌데 자꾸 두 국가론을 한다 그래 가지고 얘기하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아니, 두 국가론은 아닙니다.

○송기현 위원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면 국민들한테 통일하자는 의식을 키워 주자는 이야기가 달라질 게 뭐 있어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남남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 대

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기현 위원** 그럼요. 그런 거지. 우리가 통일 방식을 뭐 다르게 얘기하나요, 지금? 그런 것도 아니지,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통일을 어떻게 하자는 취지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차관님,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답답한 얘기를……

○**소위원장 한병도**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아예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인지 여쭙보고 싶어요, 진짜로. 이게 지난 정부에서도 다 했던 거고 교육하자는 거고 인식 제고하자는 거고 남남 갈등까지도 해소해보자는 건데.

북한 인권이라는 용어가 저는 왜 이렇게 정치화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인권이라는 그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통일하자고 그러면 왜 인권에 관심이 없느냐,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왜 인권에 관심이 없습니까? 통일이 되면 더 급속하게, 더 본질적으로 인권 문제가 해소되지요. 그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껍데기만 차용해 가지고 정치와 정쟁의 도구화 한 것 아닙니까? 사례들을 막 부풀려서 가짜뉴스도 만들어 내고 그런 게 한두 개였습니까? 사람을 공개적으로 찢어 찢어 무슨 탕에다가 넣어서 죽인다거나 그런 것 삽화 만들어서 방송에다 내고 그런 것 다 해 왔던 정치의 그런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 말고 제대로 된 통일 교육, 제대로 된 인권 교육 그런 것 하자면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습관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

좀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위원장이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데요. 나머지 사항은 다 토론해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야당 위원님들에게만, 국내통일기반조성 관련해서 상임위 감액안 있지 않습니까?

○**강승규 위원** 몇 페이지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지금 86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86페이지와 87페이지에 상임위 감액안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그러니까 두 가지만, 그 뒤의 것은 다 보류를 하고요. 사회적 대화 활성화 그다음에 국민 평화통일 체험 이것이 감액에 대한 의견은 동일합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리고 상임위안과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대해서는 5억 감액 정도, 아니면 국민 평화통일 체험 관련된 것 4억 감액 정도, 이 정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계원 위원** 거기서 타협 보시지요. 상임위의 의결을 중심으로 조정하고……

○**소위원장 한병도** 나머지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통일+센터 설치·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 이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두……

○강승규 위원 다 일괄적으로 어차피 소소위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정훈 위원 아니, 일단은……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 왜 그러냐면 상임위 감액안이 동일하기 때문에 액수나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감액을 요구한 액수가 클 때 상임위에서 조정해서 온 것도 산자부 같은 경우에 소소위로 다 넘겨 났으니까 이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 의견 등을 존중해서 나중에 소소위에서 조정하시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이게 막 너무 다……

○조정훈 위원 제가……

○소위원장 한병도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아까 정부 의견 들으면서, 지금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이 꼭지가 여러 개잖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사회적 대화 활성화는 상임위 감액 동의, 국민 평화통일문화 체험은 상임위 감액 동의인데 그러면 그 뒤에 나온 감액 요구가 또 있습니다, 서너 개가. 입장 좀 주시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거기는 원안 유지하자는……

○통일부차관 김남중 3개 다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3개는 원안 유지.

○조정훈 위원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도 원안 유지.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조정훈 위원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도 원안 유지.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조정훈 위원 통일+센터 설치·운영도 원안 유지.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소위원장 한병도 그래서 그것을 보류하자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일방적으로 야당에게만 다 입장을 철회하고 양보해 달라고 주장하십니까? 여당은 하나도 지금 양보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오전부터 계속 저희가 수용한 것은 야당이 다 수용한 거고 여당이 증감해서 동의한 게 일주일 동안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팩트지 않습니까?

○이소영 위원 송기현 위원님이 5분 만에 철회하신 것도 있었습니다.

○강승규 위원 저도 1분 30초 만에 철회한 것도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도 철회한 것 있었는데.

○송기현 위원 그게 제가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 여당 위원장인 위원회라고 하면 저도 어느 정도 충분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는데 외통위 같은 경우는 야당 위원장님 하시는 위원회잖아요.

○소위원장 한병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기현 위원 거기서 합의돼서 들어온 것은 사실상은 그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예결위 차원에서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최형두 위원 제가 이것……

○송기현 위원 어쨌든 거기서도 추가로 더 감액하자는 얘기가 나오셨을 것 아닙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상임위에서……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야말로 합의가 돼서 들어온 건데 그 정도는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김한규 위원 맞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지금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산자위도 지금 야당 위원장이고 산자위에서도 일부 기금 등에 대해서 5000억·300억을 감액 요구했다가 1000억으로 조정해서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그 부분도 추가 논의를…… 다른 위원님들, 산자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들이 감액 요구한 게 있으니까 소소위에서 상임위 감액한 것을, 결정한 것을 감안해서 조정하자 이렇게 논의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것은 증액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

○강승규 위원 아니, 감액입니다.

○조정훈 위원 감액이었습니다, 석탄 관련된.

○강승규 위원 감액입니다. 제가 잘 알잖아요.

○김한규 위원 그것도 돌려 놓을까요? 그것도 돌려 놓으면 되겠네요.

○소위원장 한병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거의 5일 동안 원활한 의사……

○조계원 위원 아니, 여당 위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증액돼야 된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안을 존중하자 그런 취지로 지금 합의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장이 5일간 소위를 진행하면서 최대한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거의 다 아마 야당 의견을 수용해서 보류 처리하고 논의하는 이런 쪽으로 가서 언론에서 ‘보류, 보류’ 그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 다 보류하면 소위 운영의 어떤 의미 자체도 없기 때문에 오늘은…… 나머지 이것도 뒤에 보면 그 전의 사업 운영과 관련 없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것도 다 보류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뒤의 내용은 반영이 안 되겠지만 상임위에서 온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감액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받아주셔야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오히려 더 원활성을 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으니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노종면 위원 제가 보수를 한번 줘……

○소위원장 한병도 예, 말씀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보수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사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요 불과 몇 달 전에 대한민국 군이 드론을 북에 보내고 또 북에서 오물풍선 날아오는 원점에 원점 타격을 하겠다고 포 배치, 포 사격을 추진한 그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아, 그동안 그래서 남북관계가 이렇게 파탄이 났구나. 이게 정부가 중심을 잡고 사회통합을 이루고 나아가서 남북통일

을 이루어야 되는데 정부가 반국가단체 그것을 정치적인 구호로 끌어올려서 적대감을 부추기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실행을 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극복하는 단계라는 거지요. 그러면 국회가 좀 앞장서서 그게 아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고 남북이 화해로 가야 된다, 통일로 가야 된다 이런 방향성을 좀 보여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통일부 관련 예산심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제가……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 더 이상 의견 안 들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90페이지입니다.

7번 통일정책추진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유사 연구·정책 자문 체계가 존재하고 신규 계획 대비 성과관리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13억 3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내역사업인 통일미래 기획 사업에 대해 6억 6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1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이것 제가 감액 의견을 냈는데요.

○소위원장 한병도 지금부터 1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예.

지금 우리가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관된 원칙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왜 어떤 정부는 전 세계가 지지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이전에 외교부장관이 북한과 협의를 해서 인권결의안 넣기로 했는데 그걸 뒤집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보편적인 인권 국가로서의 위상에 큰 이미지 손상을 입었던 것도 있고요.

이건 정말 정파적으로 또는 어느 정부에 따라서 통일정책,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북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다르게 투사한다고 해서 다르게 투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 우크라이나 침공에 북한의 공조 또 북중미 간의 강화, 이런 굉장히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연구한다고 해서 바뀔 문제가 아니고요. 정책 실효성을 검토해야 되고 이 문제는 대통령실 중심으로, 안보정책 중심으로 함께 충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답답한데요. 인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진짜로 인권을 위하는 일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보수정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까지도 존중하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한두 사람 정도 희생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정부를 운영한 것 아닌가요, 보수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 아니냐, 이

런 얘기예요, 지금. 북한 인권도 실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이해는 어떻게 할 지 모르지만 결국 그 사람들 통해서 전체적인 위험을 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북한 인권 운동하는 게?

○조계원 위원 전쟁 나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최형두 위원 무슨 전쟁을 해요?

○조정훈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계원 위원 전쟁을 유발했잖아요!

○송기현 위원 내가 발언하는 중이에요.

북한 인권 거론하면서 실질적으로 더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자고 우리 정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 사람 인권 누가 존중하지 않아요, 다 존중하지. 그런데 결국은 보수정부가 하는 것은 북한 인권을 진정으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선전만 하는 거고.

○최형두 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송기현 위원 선전으로 활용하는 거지요, 다 그것을.

○최형두 위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송기현 위원 북한인권단체가 하는 것 마찬가지고. 실제로 북한 인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두 국가론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두 국가론을 지향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제기를 하면 돼요? 두 국가론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통일을 지향하는 사업하면 안 된다, 혈세 낭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얘기잖아요, 아무리 국회라고 해도.

○통일부차관 김남중 일단 여기 있는 사업 자체는 북한 인권 문제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서 지난 정부 때 쭉 했던 공세적인 접근 자체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북한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 실체를 인정하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선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요.

○송기현 위원 저는 특히 이것 감액 의견 중에서 통일미래 기획 부분의 감액 의견은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두 국가론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혈세 낭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최형두 위원 차관님 말씀에도 어폐가 있는데 헬싱키 프로젝트라는 게 뭘니까? 인권이라는 게 보편적 프레임워크입니다. 외교, 안보 중에 제일 중요하고.

○송기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소위원장 한병도 송기현 위원님 끝나고 조정훈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아니, 철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액 의견을? 기본적인 전제가 틀린 감액 의견을 내는 것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두 국가론을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두 국가론을 주장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요.

○**송기현 위원** 여기 쓰여 있다니까요.

○**조정훈 위원** 정동영 통일부장관, 민주당에서 임명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외통위에 나오셔서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부 입장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10월 28일 날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에도 있고.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 속에서 일시적인 두 국가론을 말하는 거지요.

○**조정훈 위원** 어쨌든 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부가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계원 위원** 그게 통일을……

○**조정훈 위원** 제 발언 하고 있습니다, 조 위원님. 제가 송 위원님 발언 다 들었어요.

○**조계원 위원** 왜 왜곡을 하세요?

○**소위원장 한병도** 말씀 듣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정부에서 북한 인권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송기현 위원** 이용하는 것도 있었어요, 실제로 정략적으로.

○**조정훈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송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이번 주에 반대는 안 했지만 그건 굉장히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현 위원** 이용하는 거지. 그게……

○**조정훈 위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최형두 위원** 왜 인권에 대해서 기준이 다른니까? 북한 인권 다르고 대한민국 인권 다른니까?

○**조정훈 위원** 북한 인권을 이용하는……

○**송기현 위원** 기준은 같은데 이용한다는 얘기지, 그것을.

○**조정훈 위원**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요.

북한 인권은 아까 말씀드린,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표현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넘어갔습니다.

저는 인권의 가치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한 명, 한 명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어떤 한 사람도 인간으로서의 인권에 훼손을 당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다시 손상을 복구시키고 인권을 지향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이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만 침묵을 해서 그게 남북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제가 판을 엮자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아마 진보·보수, 여야의 가장 첨예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여기가 아닐까 하는 짐작도 합니다. 어쩌면 산업 부문에서, 산업정책, 경제 부문에서의 차이보다 아마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우리 두 당에서 가장 큰 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결위에서 이것을 서로가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으로 이렇게 서로를 비판하는 발언은 지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요.

이걸로 돌아가서 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당의 강승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당의 산자위원장이 통과한 예산의 증감에 대해서도 계속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 야당 위원장이 통과한 상임위안이기에 때문에 존중해주시다라는 발언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외통위에서만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지 저는 그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소위원장 한병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차라리 나머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견 차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한병도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통일부는 두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속에 평화적인 두 국가를 추구하는 것이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것을 분명히 하시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 관계 속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인권 인권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아닙니까? 전쟁 나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이 전쟁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최형두 위원 북한은 무인기 안 날렸습니까?

○조계원 위원 지금 평화적인 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인권 문제도 보되 남북한의 평화적인 관계를 정립하고 필요한 협상을 하자, 지금까지 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왜 그렇게 반대만 하세요?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내용적인 토론은 앞서서 여러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없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소위가 예년에 비해서도 굉장히 보류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재적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에 대해서도 다 보류했으니까 이번에도 보류해야 된다고거나 왜 통일부에 와서만 이걸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고 위원장이 그런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도저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그 중재 요청을 동의하기 어렵다 하시면 이 7번도 보류하고요.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감액 제기하지 않은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만 감액이 올라온 8번, 9번, 10번, 11번, 12번, 그 이후에도 몇 개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일괄적으로 설명 듣고 빠르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의견이 별로 없을 걸로 보이니까요.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이소영 간사님 말씀 참고해서요 통일정책추진 사업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이런 건 다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8번, 9번……

○조정훈 위원 8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8번 동의하고,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9번……

○노종면 위원 제가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9번 반대하시는 거지요?

○노종면 위원 아니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지금 딱 보니까 이 사안은 정무적인 판단들을 하고 이걸 막아야겠다, 꺾어야겠다 이런 거지 이게 심의의 어떤 합리성이라든가 정합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봐요.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야당 위원님이신 분이 위원장인 상태로 일정 정도 감액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수용하고 나머지 추가로 감액 의견이 제시된 걸 가지고 소소위에서 논의한다? 저는 어떤 협상의 기본 전제가 틀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면 다 소소위로 넘겨서 당 차원에서 대응해 주십시오. 여기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한규 위원 원래 논의하던 방식대로 진행하시지요. 오후에도 시간이 있는데 왜……

○소위원장 한병도 좋습니다.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8번.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러면 7번은 보류하겠습니다.

8번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내내역사업인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상임위 감액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증감 요인을 다시 따져서 부처 입장을 다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지금 그냥 상임위 입장 존중 그런 상태로, 기계적으로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8번 사항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건도 같은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잠깐만, 그거는 노종면 위원님 취지를 잘 아는데 기본적으로 증액 사업 부분은 증액 논의할 때 따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원안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액한 부분에 한해서는 원안을 유지한다는 취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진행하셔야 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조정훈 위원 감액 동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 송기현 위원 감액에는 동의하는 것이고, 증액은 별도로 논의하시는 거니까……
- 조정훈 위원 그건 추후 논의고.
-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아니, 지금 노종면 위원님 의견이 그게 아닙니다.
- 노종면 위원 아니, 저는 감액 자체에 동의 안 한다는 겁니다.
- 소위원장 한병도 감액도 동의를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 조정훈 위원 그러면 노 위원님은 원안 유지를 유지하시는 겁니까?
- 노종면 위원 예.
- 송기현 위원 애초에 그러면 차관님께서 그 원안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 조계원 위원 지금 증감 요인의 설명이 가능한가요?
- 송기현 위원 일단 이거는 간사님께서 협의하셔서 하세요.
- 소위원장 한병도 이 안은 상임위안, 부처 의견과 다수 위원님들이 감액에 동의를 하니까요. 노종면 위원님, 이 안은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송기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증액 사업하고 다른 내역사업이거든요.
- 노종면 위원 상임위에서 깎은 거 깎은 대로 다 인정하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 국민의 힘에서 더 깎자고 그러는데……
- 조계원 위원 아니, 나중에 이거 증액 논의……
- 김대식 위원 증액 논의할 때.
- 조정훈 위원 증액 논의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 노종면 위원 아니, 증액 얘기가 아니라 감액 얘기하는 거잖아요.
- 임미애 위원 감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 송기현 위원 감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는데 소위가 그렇게까지 논의를 하면 다시 상임위에서 감액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다 저희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위원장 한병도 이 건은 노종면 위원님의 취지를 제가 너무 잘 알겠습니다. 앞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액에 대해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건은 상임위안, 감액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한규 위원 저도 잠깐만 한 말씀……
- 소위원장 한병도 예.
-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부처에서 상임위에서 감액됐다고 해서 무조건 동의할 필요 없다라는 취지신 것 같아요, 노종면 위원님이. 그래서 만약에 상임위에서 감액된 게 정말 적정하면 동의하시고 저희 상임위의 사정들을 잘 몰랐으니까, 만약에 통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그렇게 의결한 거면 여기서 그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사라는 거지 상임위에서 감액됐다고 무조건 또 반대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임위 감액안이 적정하면 또 적정하다고 지금처럼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한병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러면 감액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9번 사업부터 14번 사업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2025년 11월 4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남북관계관리단이 폐지되고 남북회담본부 등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등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경비의 증감액이 필요한바 이를 위해 9번 사업부터 14번까지 6개 세부사업에서 총 37억 2700만 원을 감액하고 15번부터 26번까지 12개 세부사업에서 40억 1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감액 사업내용은 92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액 연계사업이므로 통일부와 기재부의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상임위 증액과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실질의 변동 없이 조직개편에 관련된 사항을 자동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증감 연계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페이지는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남북협력기금 지출 감액 사업 3건과 감·증액 사업 2건이 있습니다.

먼저 민생협력지원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민생협력 지원의 성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보조금 집행 공개 거부 행태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2823억 9900만 원 감액 의견과 2823억 3900만 원 감액 의견, 794억 95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 지난해에는 2730억이지요. 그리고 올해는 5500억,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실제로 남북관계가 그리고 북한의 태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완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예산은 100조 원의 국가부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해야 될 만큼…… 국가부채가 결국 이자만 해도 우리 국방비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되는 정도의 막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북한의 영유아 지원도 해야 되고 어트리션(attrition) 뭐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증액하는 것이 이게 정말 올바른 정책이나 그리고 특히나 막중한 국가부채 부담 증가, 이로 인한 이자율의 증가 또 이로 인한 금리라든가 환율에 대한 영향을 감안하면 부처에서 좀 현실 가능한 방식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실제로 쓸 수 있는 부분을.

○**통일부차관 김남중**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추경 때 감액된 부분이 반영이 돼 가지고 그렇게, 2배가 증가한 걸로 말씀하시는데 원래 당초에는 4758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게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년도에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내년 4월까지 특히 굉장히 관건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제가 잠깐만 할까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송기현 위원** 차관님이 설명을 잘하셨는데 이 해당되는 사업 부분은 추경을 할 때 올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면서 줄어든 것이고 올해 본예산에 대비하면 늘어난 게 없다는 취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송기현 위원** 그리고 또 그 얘기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정말 인권이 중요한데 영유아 이런 문제, 우리가 늘 매년 준비했던 것을 다 감액하자 그러면, 2823억을 다 감액하자는 것 아니에요, 이게? 참 답답한 얘기네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한동안 국경 봉쇄 장기화가 돼 가지고 인도적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실제로 또 몇몇 종교단체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송기현 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요가 더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저희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협력에 대해서, 특히 어려운 분들 지원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는 거지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듣는 바로는 북한 정권이 윤석열 정부든 이재명 정부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관심 없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더 강하게 하고 있는데.

혹시 통일부차관님,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겠다 또는 필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조정훈 위원**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만약에 없더라도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가뭄이 났다, 홍수가 났다고 그러면 지원하는 것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면 추경을 하든지 또는 예비비를 쓰든지 또 다른 전용을 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인도적인 상황은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 이것 만약에 전액 불용 나면 어떻게 합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인도적인 상황은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고 그런 절차들을 거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반영한 예산은 갑자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저는 감액을……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조계원 위원님 말씀 듣고 이것 토론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북한의 인권 얘기가 또 자주 언급됐는데요. 실제로 국제 봉쇄의 장기화로 인해서 인도적 상황이 많이 악화된 걸로 보여집니다. 2020년부터 22년 북한의 인구의 약 45.5%가 영양 부족에 있고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필수예방접종을 전혀 못 받은 아동이 32.5%, 이건 유니세프 분석입니다. 그리고 7년 연속 결핵 고위험국이고 결핵사망률이 2023년 20%에 달합니다. 이건 WHO 분석이지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공여 자체가 2001년에는 5000억 수준이었는데 지금 2024년에는 32억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봉쇄 이후 국제기구들이 평양에서 대폭 철수했고 그리고 아직까지 복귀도 안 하고 있고 지금 국제관계는 정말 요동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이걸 그래도 풀어 갈 수 있는 곳은,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도적 차원에서 이 문제는 바라봐야 되고 준비하고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집행이 안 된다 할지라도 지난번처럼 추경에서 그것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하고 있어야지 바로바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추경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급박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설사 집행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위원장 한병도** 최형두 위원님 말씀 듣고 임미애 위원님 말씀 들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 만일 북한 상황에서, 더 참혹한 사태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호의를 받아들여서 이런 인도적 지원을 받도록 한다면 저희들이 더 나서서 증액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 때문에 또 예비비라는 걸 별도로 두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가 또 인도적 사태라든가…… 그런데 무조건 오천몇백억씩, 이 국채 이것도 이자가 있습니다. 국가가 지금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서 예산을 짜고 있다는 것을, 편성하셔서, 통일부도 나중에 이런 예비비에서 대폭 집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긴급하게, 저희가 먼저 나서서라도 할 테니까 이런 예산의 효율성은 좀 감안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2025년도에도 당초에 4758억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래서 깎았지 않습니까, 집행하지 못하고.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런데 그때 상황은 전부 하반기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최형두 위원** 하면 예비비 집행하고 우리가 적극 동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지금 말씀이 인도적 지원에 반대하는 것 아니다, 현실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예비비라든지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 일의 성격을 저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선 예비비라든지 추경이라는 것을 담보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없다, 그렇지만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조를 해야 되는 그것이 있어야만 정부인 것이지 이것은 이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정부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런 기조와 그 대응의 그런 것이 너무 엇박자가 나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덧붙여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이게 저희 사업 내용을 보면 북한에 영유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보건 의료 협력 그다음에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이런 것들입니다.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셨는데,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정책의 소극적인 의사표현입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이 사업과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써야 된다면 그때 적극 하겠다라는 것과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 표현의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고.

아울러 환경 협력이 저는 매우 시급하다, 북한의 휴전선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바람을 타고서 남쪽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입는 피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환경·산림·농업 이런 부분에서 전면적인 인도적인 지원과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은 그전부터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서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노종면 위원** 동의합니다.

○**조계원 위원** 동의해 주시지요. 북한의 인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형두 위원** 이게 몇 년째 돈을 못 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를 보건대 우리 희망대로 안 될 가능성도 큼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00조 원의 부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자, 통일부에 이 돈을 쌓아 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 그것은 어떤 경우는 몇 조가 들더라도 해야지요.

○**임미애 위원** 이게 사실은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북한에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기보다

남한에서 도발한 측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그것은 진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협정 이후에 도발 횟수를 보십시오. 그리고 북한은 무인기 안 날렸습니까? 지금 계속 도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에서 정말 볼 것 안 볼 것 가려서 해야지요.

○김대식 위원 보류로 넘겨 갖고 의논하시지요, 침례하게 대립되니까.

○임미애 위원 인권 얘기를 계속하시면서 이것을 또 보류하자라는 게……

○노종면 위원 도발의 기준이 북한이 됐습니까?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보류로 해 가지고 의논하시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이게 보류가 된다고……

○김대식 위원 이게 너무 침례하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류된다고…… 글썽요. 보류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경제교류협력 대출(융자)와 3번 사업이 지적 사항이 유사하므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현 정부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북한 정권의 태도를 감안하여 예산 증액분 14억 8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111페이지 3번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예산 증액분 12억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아마 똑같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12페이지, 경험기반(무상)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2억 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상임위 감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두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에 대해 최근 9년간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고 해당 사업 예산의 편성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1789억 2500만 원 전액 감액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현 정부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북한 정권의 태도를 감안할 때 예산 증액분 1184억 5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5번 개성공단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앞선 사업과 같은 이유로 예산 증액분 13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13억 40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것도 위원장님, 아까 경험에 관한 논리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더욱 비공개 경제협력 예산이라……

○최형두 위원 우리가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너무 이런 문제에 첨예하게 정치적 입장들을 내세우시니까 실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포괄적으로 해서 감액……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또 감액안 내용이 다릅니다. 정부가 포괄적으로, 절충을 통해서……

○소위원장 한병도 노종면 위원님 말씀 들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저도 감액 내용 보면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은 좀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총대를 메고 계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미 의결된 건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삭감하는 거요, 오해가 없기 위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공동연락사무소의 복원에 대한 의지가 정부에 없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복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 논의 과정에서 이것들이 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이유로 일단 감액을……

○노종면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설치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없애는 거지만 계속 노력을 하는 거지요, 복원을 위한 노력은?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당연합니다.

○노종면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통일부 이것을 하면서요, 물론 지금 이것도 아마 쟁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이것 책자를 보니까 너무 많은 내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보다도 너무 무분별하게 삭감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다른 것……

○소위원장 한병도 예.

○조정훈 위원 저는 위원장님의 운영, 진행 방식에 동의하고 존중합니다.

다만 방금 전에 하신 여당 위원님의 말씀은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상대방 위원에 대해서 총대를 메고, 짝한 마음이 있다, 이건 저는 굉장히 모독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형두 위원 예산소위에서 한 번도 이런 식의 발언이 없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동료 위원한테? 이것은 저는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최형두 위원 그만하셔도, 됐습니다. 빨리빨리……

○소위원장 한병도 예,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신상발언할게요.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 그냥 보고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신상발언 없습니다, 이런 데서……

○소위원장 한병도 그냥 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16페이지입니다.

○노종면 위원 본인 입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16페이지 통일부 마지막 심사 대상 사업들입니다.

기타특이사항이 7건 있습니다.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부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국립통일교육원이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조직 개편으로 정보분석국이 정세분석국으로 바뀌었습니다. 5번과 6번은 이를 반영한 세부사업명 변경입니다.

그리고 7번은 남북관계관리단이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이름을 ‘남북관계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남북회담 홈페이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 외교부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비목 변경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통일부 소관 감액심사 마치겠습니다.

통일부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계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방용승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사무차장 박학민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18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1건만 있습니다.

먼저 1번 지역협의회 활동추진입니다.

내역사업인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미 민주평통이 추진 중인 다수의 통일 관련 사업과 목적 및 내용이 중복되고,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단순히 명칭만 변경하고 개최 횟수를 대폭 확대한 것이므로 26년도 증액분 10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임위에서 4억 7700만 원 증액 의견과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16억 80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방용승**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듯이 예결위 열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16억 8000만 원 증액을 희망해 주셨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하고자 하는 사회적 대화는 정해져 있는 합의를 전제로 해서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아니고 민주평통 내에 있는 진보적인 성향과 보수적인 성향의 다른 입장들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입장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고 이해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 대화입니다. 그래서……

○**김대식 위원** 원안 유지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방용승** 예, 그래서 원안대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원안 유지요.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먼저 말씀 듣고 그다음……

○**김대식 위원** 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원안, 국민 역량 결집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데 처장님, 지난번 예산은 얼마였어요? 지역협의회 활동추진을 얼마 계산을 했는데 올해 2026년안은 왜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박학민 차장……

○**소위원장 한병도** 실무자가 답변해 줘도 좋습니다.

○**김대식 위원** 실무자가 답변…… 이것 예산 왜 이렇게 잡아 댔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재정담당관 허예원** 원래 올해까지 예산은 지금 900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이번에 인상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억이 넘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민주평통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을 활용해서 분열되어 있는 통일 관련된 공감대나 국민들의 인식들을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김대식 위원** 그래서 왜 줄였냐고요. 왜 그렇냐 하면 지역협의회 활동추진은 계속해 왔던 거잖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재정담당관 허예원** 예,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해 왔는데 왜 작년보다 줄였냐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재정담당관 허예원** 아, 전체적인 세부 예산이시면……

○**김대식 위원** 증액을 해야지, 증액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재정담당관 허예원**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줄이고 싶어서 줄인 건 아니고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정리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줄인 거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재정담당관 허예원** 예.

○**김대식 위원** 저는 이것은 좀 확대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소위원장 한병도** 취지는 원안 유지신 거지요?

○**김대식 위원** 그렇지요. 원안 유지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소위원장 한병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송기현 위원**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이게 증액안도 있고 감액안도 있고 원안 유지안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여기서 결정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 부처에서 원안 유지안을 지금……

○**송기현 위원** 부처안은 그렇지만 증액을 하자는 위원님도 많으셔서 여기서 원안 유지해 버리면 증액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철회하거나 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 점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보류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송기현 위원** 보류해서 가지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원안 유지해도 나중에 증액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송기현 위원** 아니요, 원안 유지하면 소위에서는 그 금액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이거는 만약에 감액 의견을 원안 유지로 결정하시면 나중에 증액 심사하실 때 더 증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원안 유지로 결정하셔도 증액의 길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부처에서도 원안 유지 의견이 있는데 또 아주 많은 위원님들의 증액 요구가 있기 때문에 보류해서 소소위에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감액심사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총무비서관 윤기천입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재무팀장 채정관** 재무팀장 채정관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석전문위원 보고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27페이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 감·증액사업 2건 있습니다.

먼저 1번 국정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용역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11억 9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일반연구비에 대해서도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9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비서관님.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저희 기관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희가 보니까 일반용역비, 국정운영관리비를 지금 본예산 대비 11억이나 증액하셨어요. 다른 정부 또는 여러 정부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11억 증액이 필요합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그 증액 사유로는 2026년은 이재명 정부 2년 차로서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원칙인 경청 또 국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홍보 및 경청 행사 간담회 예산으로 일반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조정훈 위원** 두 번째도 같이 논의해도 되나요?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아니요, 지금 국정운영관리……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 꼭지, 강승규 위원 이거……

○**소위원장 한병도** 예.

○**조정훈 위원** 두 번째 안건은 지금 일반연구비로 본예산 대비 거의 10억 원이나 증액 하셨습니다. 이것 뭐 연구하실 게 이렇게 많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그 증액 사유로는 국정의 행정 수요인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자주, 많이 듣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강화하는 측면입니다.

○**조정훈 위원** 여론조사 예산입니까, 이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일반 국정 여론조사요.

○**최형두 위원** 제가 한말씀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 최형두입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청와대에 근무를 해 보면서 느낀 점인데 대통령실이 너무 많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내각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총리실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할 역할이 자꾸 줄어듭니다. 나는 그래서 더욱이 이번 예산이 국가부채를 늘리면서까지 하는 예산인 만큼 대통령실은 이런 문제에서 예산을 아끼는 솔선수범을 보여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처에서도 해야 될 일이고 또 부처가 자기 업무를 평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전년도에 없던, 이걸 지금 무려 10억 이상 늘렸는데, 이런 예산을 굳이 편성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술선수범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자칫하면 과도한 내각과, 국무회의라든가 국무조정실,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는 역작용까지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감액 의견을 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정말 해야 될 중요한 국정 수행 목표에 집중하고 내각은 내각대로, 국무조정실은 조정실대로 일을 하게 해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얼마나 좋습니까? 국채 발행을 100조나 하게 되는데 대통령실은 오히려 깎았다 이런 수범을 보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노종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여론 수렴 그리고 또 대국민 접촉 이런 것들을 지금 늘려 가고 있는 과정인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노종면 위원 그리고 이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지는 것이고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걸 깎아서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대국민 접촉, 경청, 홍보 이 기능을 축소시켰을 때 대통령실의 국정 주도 능력이라든가 또는 민심에 위반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동력이라든가 이게 손상이 안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만약에 지장이 없다면 깎아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상당히 호의적이라고 봅니다, 언론에서도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런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좀 더 깊게 듣고 좀 더 널리 홍보해서 기왕에 추진하는 정책을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 맞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첫 번째 예산이요, 이번에 사실 취임하시고 나서 타운홀 미팅을 17개 광역 시도별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차례 했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정확한 횟수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한 것만 해도 지금 대구, 강원…… 한 3회 정도 우선 기억하고 있는데요……

○임미애 위원 타운홀 미팅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 사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저희도 타운홀 미팅에서 경청되는 국민의 목소리를 일반 부처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한 국정 운영의 기조를 내년에도 지속하고 확대시키겠다는 의지가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다라고 저희가 평가해도 될까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실이 국민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런 정책의 방향성하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깎아야 될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이번에 정상적인 정권 교체가 아니었거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사전에 인수위라는 정권 초기의 준비 기간이 전혀 있지 못한 상태에서 회계상으로는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건데, 또 야당에서는 국민의,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주문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원안으로 반영되기를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의견 다 났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아마 이견이 첨예해서요 보류하도록……

○**조정훈 위원** 보류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28페이지 2번 업무지원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정보 미공개 및 필요성 부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는데 동일한 이유로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필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본 건도 마찬가지로 저희 기관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대통령실에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잖아요, 솔직히.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렇게 깎았으면 ‘아, 우리 정권 잡아 보니까 좀 필요하더라’ 최소한 이 정도의 유감 표명은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비서관님? 나도 대통령 모셔 보고 그랬지만 이걸 ‘우리가 야당일 때, 우리가 야당이니까 과감하게 깎았다. 그런데 막상 정권을 잡아 보니까 이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더라. 이런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야당도 이러한 부분은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든 뭔가 좀 발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내가 틀린 말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지난 7월 4일 추경예산안

통과 후에 저희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공식 사과를 하셨습니다.

○조정훈 위원 사과 이미 했잖아.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원안 유지하는 걸로.

○조정훈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 김대식 위원님 지금 그것 아십니까?

○조정훈 위원 여당은 발언 없으십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아직은……

○조정훈 위원 저는 아까 사과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보 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언젠가 징벌적 감액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것은 예산의 적절한 이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 해요. 다만 지금 저희가 보면 82억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안건을 오늘 깔끔하게 합의하기 는 어렵다는 것 다들 짐작하실 텐데, 저는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법사 위에서 법무부 특별활동비 20억을 아마 특수활동경비로 다 이전해서 의결한 건 알고 계 십니까, 총무비서관님?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 차이가 뭐니까, 특활비하고 특수활동경비의 차이?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특활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고도의 기밀이 유지되는 국정상황 또 국제안보, 경제 이런 데다 사용하는 게 특활비고요 특경비는 예산, 조사, 인사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특수활동비는 어떤 증빙도 필요 없고. 그렇지 요? 특경비는 증빙이 필요한 것 알고 계시지요, 총무비서관이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조정훈 위원 법무부가 여러 가지 굉장히 민감한 수사·조사를 하는데도 다 특경비로 민주당 상임위원장 주관으로 통과를 시키셨습니다. 청와대도 대통령실도 이 금액 중의 일부를 특경비로 전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아까 이번 주에 계속 특수활동비에 대한 투명성 강화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주장하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특경비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쓰겠다 아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총무비서관님?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위원님,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대로 사용처가 있는 거고 특경비도 특경비대로 사용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훈 위원 그런데 법무부 특수활동비를 다 이 목으로 전환한 거하고 똑같은 취지 인데 왜 대통령실은 적용되면 안 될까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

○소위원장 한병도 정리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말씀 듣고 이소영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부처마다 다 특징이 있을 겁니다, 업무 특수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부처보다 어느 기관보다 대통령실의 업무의 기밀성 그리고 또 정무적인 민감도 이 런 것들을 감안할 때 타 부처랑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취지이신지 는 알겠는데. 앞선 대통령실 차원의 입장표명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지금 야당에서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타 부처랑……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심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합의하는 성과를 한번 내 보시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김기웅 위원님 말씀 듣고 이소영 간사님.

○김기웅 위원 다른 얘기는 아니고 저도 비서실 근무해 봤는데 특활비하고 업추비하고 특경비를 합쳐 보면 지금 140억이잖아요. 이게 3 실장에 8 수석에 3 차장이면 열네 분이잖아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김기웅 위원 계산해 보면 각 수석실에서 하루에 500씩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500만 원씩 그분들이 다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500만 원씩 쓴다는 게……

제가 드릴 말씀은, 좀 많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간사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소영 간사님.

○이소영 위원 총무비서관님, 이번에 대통령실이 특활비 사용내역을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했잖아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실이나 청와대가 그렇게 공개한 것은 처음이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이소영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야당 위원님들은 공개의 정도나 수준이 더 강화돼야 된다, 더 넓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장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왔던 대통령실 특활비가 이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공개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게 첫 번째 노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개선되어 가면서 투명성이나 감시 기능 강화라고 하는 것이 더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대통령실에서 기존의 대통령실, 청와대의 매우 불투명하게 사용되던 특활비를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그 투명성과 집행의 적절성을 개선해 나갈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이번에 이렇게 원안 유지해서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5초만.

○소위원장 한병도 예.

○조계원 위원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차, 2년 차 특활비 깎은 적 없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최형두 위원 잠깐만, 최형두입니다. 10초만……

간사님 말씀하셨는데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가 그 정도로 투명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으니까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위원장 한병도 원안 유지?

○김한규 위원 그래서 통과?

○최형두 위원 아니, 안돼.

○이소영 위원 분위기는 원안 유지인데……

○조정훈 위원 이 분위기를 소소위 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래도 간사님께서 소소위에서 원안 유지의 취지를 반영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으니 그것을 반영해서 이것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129페이지 마지막 심사 대상입니다.

시설관리 및 개선입니다.

현재 예비비가 청와대 공사 등에 사용되고 있는바 2026년도 예산에 동일 목적의 공사를 다시 반영하는 것은 중복이므로 25억 1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과 1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이것 마찬가지로 저희 기관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대통령실이 국가의 상징이고 비 새는 것, 업무 환경이 나쁘다는 것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할 의사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총 259억 규모의 예비비 집행을 하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조정훈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까 계속 투명하게 쓰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조정훈 위원 예비비 쓰시는 것 반대는 안 합니다만 어떻게 쓰셨는지 공개하시면 저희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위원님, 예비비 이번에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 5월 결산 때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공개하실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결산심사 때요.

○조정훈 위원 아니, 그냥 한 줄로 예비비 ‘썼다, 말았다’가 아니고요 내역을 공개하시겠냐고요. 금액이야 당연히 공개하는 거지요, 결산이야.

○조계원 위원 예비비 항목이니까 공개하겠지요.

○조정훈 위원 아니, 지금 듣고 싶다고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위원님,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내년 5월에 결산할 때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세부 상세서까지 5월에 보고한다고 하니 결산 때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이 안은 원안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세부 상세비용 지출내역을 국회에 보고하시는 겁니다, 예비비.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5월 달에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계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강병인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 강병인입니다.

○대통령경호처기획부장직무대리 서성열 기획부장 서성열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31페이지 대통령경호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중액사업 1건만 있습니다.

경호장비 시설개선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의 둘째 줄입니다.

26년에는 종전과 같은 수준의 공사 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설비 중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강병인 우리 기관은 정부안대로,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됐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인데 개보수 올해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강병인 예.

○조정훈 위원 그것은 어떤 비용으로 하고 계십니까?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강병인 그건 예비비로 지원을 받아서……

○조정훈 위원 그것도 예비비지요?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강병인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지금까지 얼마 쓰셨습니까?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강병인 지금 거의 집행을, 한 80% 이상 쓰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얼마?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강병인 예비비를 97억 86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공사 및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건데 경호시설 지금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청와대 이전해서 청와대 노출됐기 때문에 경호시설 필요하다, 이걸 백번 양보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출의 투명성은 저희 국회의 의무이고 꼼꼼히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비비 공개 언제 하실 겁니까?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강병인 예비비 공개 부분에서는 집행을 하고 내

년도 결산 때 국회에서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자세한 예비비 내역, 아까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상세 예비비 사용내역 공개를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대통령경호처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강병인** 저희는 보안시설이 주이기 때문에 비밀에 분류되지 않는 부분은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밀은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비밀에 분류되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적절치 않은 걸로 판단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국가 비밀사항이 되는 것들은 왜 국가기밀인지 첨부해서 예비비 상세내용을 국회에 보고한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겠습니까.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강병인** 비밀에 분류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알겠습니다.

시설관리 및 개선,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소위원장 한병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감액심사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국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계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박태형입니다.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이양성** 기획조정실장 이양성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34페이지 국회입니다.

세출 감액사업 4건, 감·증액사업 8건 있습니다.

1번 사업을 비롯해 9개 사업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국회 기록원법 통과에 따라 국회기록원의 인건비, 기본경비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바 1번부터 4번, 8번 사업부터 12번 사업, 이상 9개 세부사업에서 71억 6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고 14번·16번·19번·20번 4개 사업에서 139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예결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감액 사업명은 134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액 연계사업이므로 국회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국회 의견 듣겠습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사무처는 증감액 연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직제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

니 운영위 논의 결과를 봐 가면서 정확하게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특별위 운영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헌법개정특위 공론조사 사업에 대해 헌법개정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공론조사 실시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4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국회 의견 들겠습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사무처에서는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고 지난 6월 대선에서 주요 정당 후보자들이 개헌을 공약하신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헌특위가 구성돼 있지는 않지만 향후 개헌특위 구성 가능성이 저희는 높은 것으로 보고 개헌특위가 움직일 경우에 그 논의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한 분씩만 들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헌법 개정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장님 혼자 결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고 헌법개정특위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많은 아주 굉장히 의미 신중한 그리고 중요한 지난한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다 전제하고 40억 원을 예산을 여기다가 톱 박아 놓는 건, 아까 기재부차관도 얘기하셨지만 확정되고 법적 의무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넣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국회가 헌법개정특위를 만드는데 예산이 없어서 헌법개정특위가 못 돌아가게 하겠습니까? 어떤 수를 쓰더라도 저는 그거는 보장되는 수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감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국회에서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여야 모두 대선후보들께서 공약했던 사항이어서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각 정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위는 구성이 되는 것이 맞기도 하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리 대응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6번 사업과 다음 7번 사업은 지적사항이 유사하므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번 국회방송운영 내역사업인 개헌 특집 편성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개헌 논의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대립 중인 상태이므로 26억 1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바로 아래 칸에 원안 유지 필요 의견도 있습니다.

이어서 140페이지 7번 입법활동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헌법개정 국민공감대 확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19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아래 칸에 원안 유지 필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국회 의견 들겠습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사무처는 두 사업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개헌 특집 편성의 경우에는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숙의와 공론화 사업의 일환으로 단순한 홍보가 아닌 국민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뒤의 지상파와 연계된 프로그램도 동일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액 의견 중에서 염려하시고 있는 편향성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충분히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의 의견 들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희 위원님들 대표해서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45억 보류 요청을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헌법개정특위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다양한 국민들의 입장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저희 국회가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TV 프로그램 편성에 26억 원 그다음에 헌법개정 국민공감대 확산에 19억 원, 앞에 있는 45억까지 합쳐 보면 거의 80억~90억 원을 지금 헌법개정특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책정을 한다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개헌과 관련한 방송 프로그램의 필요성, 국민 홍보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책임 있는 공당에서 이런 역할을 대신해서 이슈를 이끌어 주고 국민들께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여야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국회방송이 이런 역할을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 안도 쟁점이 있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국회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국회 소관 감액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이석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 조영호 기획조정관 조영호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73페이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이 2건 있었는데 1건이 철회되어 1건만 남았습니다.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입니다.

내역사업인 인권교육원 운영 준비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인데 교육원의 위치 및 대중교통 노선,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할 때 셔틀버스 운행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2억 9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아래 칸에 2억 3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인권교육원 버스 운행 사업에서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교통 접근성은 전국에서 오시는 교육생의 교육 만족도와 교육 신청에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개원 초기 교육원의 안정적 정착과 인권교육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 운행과 같은 교통 편의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원까지 도로 상황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합니다. 경사로라든지 인도 단절 이런 점 등을 감안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다음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조성도 고민 끝에 저희가 철회를 했거든요, 감액 철회. 그래서 노 위원님께서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면……

(웃음소리)

이것으로 끝입니다.

○노종면 위원 인근 역에서 위원회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지요, 교육원까지?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한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얼마나 천천히 걸으면 20분 걸리지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조금 편차들은 있는데요.

○노종면 위원 1km잖아요, 1km.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저도 한번 걸어 봤는데요. 제가 걸음이 좀 빠르는데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늦는 분들이 한 2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게 물론 사전에 저희가 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들었을 때 충분히 소명이 안 된 것이, 이게 과연 이곳을 찾아오시는 외부 교육생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인가 이 부분에서 소명이 잘 안 돼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 오시는 분들이 전

국 단위에서 오시는데 장애인분들이 소수지만 있으신데요. 저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 있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분들의 접근성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저희가 난감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저희가 사전에 파악할 때 진행됐던 문답의 흐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비중이 낮아도 그분들을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누구나 다 공감할 겁니다.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생들보다는 직원들이용 빈도가 늘어날 셔틀버스보다 장애인을 위한 밴 등의 다른 수단을 강구해 달라고 했을 때 그것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위원님, 그게 소수지만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연령대도 다양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 저희가 꼭 장애인만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종면 위원** 조금 더 내용을 들어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이것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의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를 마치기 전에 부대의견에 대해 심사해 주실 위원님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한규 위원님, 국민의힘은 강승규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두 분 위원님께 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심사 및 일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양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강승규 김기웅 김대식 김한규 노종면 박민규 송기현 이소영 이재관 임미애
조계원 조정훈 최형두 한병도

○청가 위원(1인)

박형수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전문위원 정대영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박태형

기획조정실장 이양성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윤기천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강병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방용승

사무차장 박학민

기획재정담당관 허예원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외교부

제1차관 박윤주

제2차관 김진아

개발협력국장 박종한

통일부

차관 김남중

기획조정실장 구병삼

재외동포청

청장 김경협

기획조정관 오진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이석준

기획조정관 조영호